

ISSN 2765-3005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ISSUE PAPER

고문헌의 성격과 범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

Vol. 7

2021. 1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의 성격과 범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

옥영정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이혜은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유춘동 교수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오영식 근대서지학회 회장

김효경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제7호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서혜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0799

팩스 02-590-0546

누리집 <http://www.nl.go.kr>

ISSN 2765-3005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으며,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변경·배포할 수 없습니다.

I. 고문헌 시기 범위 확대의 필요성 02

II. 한국 고문헌의 현황과 기준 설정 검토 02

1. 국내 도서관 및 연구기관 소장 고문헌의 현황과 기준 설정의 문제점
2. 고문헌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주요 항목과 사례

III.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의 시기적 추이와 범주 06

1.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장서의 관리 규정
2.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장서의 시기적 추이

IV. 시대 변화에 따른 근대문헌 범주의 재설정 문제와 방안 08

1. 근대문헌의 관리 실태
2. 근대문헌의 관리 방안: 규정과 범주 마련 중심으로

V. 맺음말 13

| 주요 키워드 |

고문헌범위, 근대문헌

고문헌의 성격과 범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

옥영정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이혜은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유춘동 교수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오영식 근대서지학회장

김효경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요약

우리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자 중요한 자산인 고문헌은 일반적으로 시기 기준을 1910년 이전에 간행된 자료로 해왔고, 한국목록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어 많은 고문헌 소장기관이 이를 기준으로 자료를 관리한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1910년 이후 간행된 자료도 고문헌으로 인식하여 관리되고 있고, 특히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자료의 경우 산성화로 인한 훼손의 심각성, 한국 근대 문화사에서 기록 자료의 가치 부각 등으로 고문헌 시기 범위를 확대하여 수집·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등 고서 약 230만 책을 소장한 여러 기관(민간 소장처 제외)에서는 국내 고문헌의 기준을 1910년 이전에 발행한 자료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 수록된 서지데이터(47만 5천여 건)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서(62,191종)를 분석한 결과 1911년 이후 자료를 고문헌으로 관리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고문헌의 기준연도를 기존의 1910년에서 1945년으로 확대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문헌 발행시기 범주의 확장과 함께 고문헌 범주 내에서 판본, 종이, 장정 등의 설정 기준을 적용한 근대문헌의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근대 시기의 사회상을 현재에 전달하고 전통과 현대의 가교역할을 하는 근대문헌은 서양식 장정 방식의 신식인쇄본으로 제작되어 비록 고문헌 범주에 속하더라도 종이의 재질이 상이하므로 일반 고서와 보존관리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 키워드 고문헌범위, 근대문헌

* 이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서지학회가 공동기획한 '고문헌의 성격과 범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 연구의 결과물로 『書誌學研究』 제87집(한국서지학회, 2021. 9.)에 수록된 3편의 논문(옥영정 교수의 「한국 古文獻의 현황과 기준 설정에 대한 검토」, 이혜은 교수의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의 시기적 추이와 범주」, 유춘동 교수, 오영식 회장의 「시대 변화에 따른 근대문헌 범주의 재설정 문제와 방안」)을 바탕으로 요약하여 작성된 것이다.

I. 고문헌 시기 범위 확대의 필요성

고문헌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며 후손에게 길이 보존, 전승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귀중한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통상 고문헌이라 하면 1910년(대한제국기) 이전에 간행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왔고, 『한국목록규칙』(제4판)에도 규정하고 있어 많은 고문헌 소장기관이 이를 기준으로 자료를 관리한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1910년 이후 간행된 자료도 고문헌으로 인식하여 관리하고 있고, 특히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자료의 경우 산성화로 인한 훼손의 심각성, 한국 근대 문화사에서 기록 자료의 가치 부각 등으로 고문헌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집,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II. 한국 고문헌의 현황과 기준 설정 검토

1. 국내 도서관 및 연구기관 소장 고문헌의 현황과 기준 설정의 문제점

국내 고문헌 소장처 중 도서관과 관련 연구기관은 국립도서관 3개관, 공공도서관 37개관, 국립대학도서관 19개관, 사립대학도서관 67개관, 연구기관 5개관, 박물관 및 기타 소장처 44개관 총 175개관이다.

전체 현황은 고서의 경우 국립도서관 305,764책, 공공도서관 32,138책, 국공립대학도서관 568,500책, 사립대학도서관 844,494책, 연구기관 512,047책으로 총 2,262,943책이며, 고문서는 총 240,039점, 책판은 84,395장이다. 다시 말해 고서는 전국적으로 최소한 약 2,262,943책(고문서와 책판 제외)이 소장되어 있고 기관별로는 전체 소장량의 62% 이상이 대학도서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연구기관,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순의 분포를 보인다.¹

국내 고문헌 현황에서 확인되는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소장처마다 고문헌의 정의, 시기나 형태에 대한 주요 항목별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대체로 발행시기를 중요한 기준 항목으로 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장정 방식이나 판본이 첫 번째 기준이 되기도 한다. 기준이 불확실하게 되면 각종

1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한국 고문헌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5-57.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고문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 곳은 비교적 규모가 큰 소장기관이며, 별도 기준이 없는 곳은 한국목록규칙(제4판)의 고문헌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소장처(기관)마다 고문헌(고서) 발행의 하한 시기가 조금씩 다른 것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특히 발행의 하한 시기를 한국목록규칙(KCR)의 기준으로 1차 적용을 하다보면 1911년 이후 자료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2. 고문헌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주요 항목과 사례

여러 선행연구와 현장에서 통용되는 고문헌의 기준을 종합하면, 발행시기, 문자, 판본, 장정, 내용에 따라 ① 발행시기가 한국본의 경우 1910년 이전, 중국본은 청말(清末, 1911년) 이전, 일본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7년) 이전에 간행되었거나 필사된 문헌, ② 문자에서는 한문을 비롯하여 한글, 일본어, 몽골어, 만주어 등 동양제국(東洋諸國)의 고어(古語)로 된 것, ③ 판본은 전통 방식의 인쇄나 필사로 제작된 것, ④ 장황 형태로는 권자본(卷子本), 첩장(帖裝), 선풍엽(旋風葉), 호접장(蝴蝶裝), 포배장(包背裝), 선장(線裝) 등으로 된 문헌, ⑤ 그 내용은 전통적인 고유사상과 학술의 성격이 있는 자료이다.

현행 고문헌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까지 한국 고문헌의 서지데이터를 가장 방대하게 갖추고 있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 수록된 서지데이터 약 47만 5천여 건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가. 발행시기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11년 이후 1999년까지 발행된 고문헌은 113,745건이다. 전체 47만 5천여 건의 약 24%에 해당하는 고문헌이 일제강점기 이후 발행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표 1〉 참조) 1911년부터 1945년까지 국내외 고문헌의 서지 건수가 1940년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급격히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 1945년까지 고문헌은 54,594건으로 113,745건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런데 약 44%를 차지하는 1961~1999년까지의 고문헌이 책의 형태는 동양식 선장본이지만² 대부분 영인본 또는 1960년대 이후 신식인쇄본이어서 사실상 고문헌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할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일제강점기인 1911~1945년 사이에 발행된 고문헌이 1911~1999년까지 발행된 고문헌의 85%를 차지한다고 볼

2 이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 등록된 각급 소장처에서 고문헌의 여러 기준 중 장정 형태를 우선 적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 있다. 즉, 현재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 등록된 고문헌 상당수가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것임을 확인해주는 것인데, 이는 곧 1910년을 원칙으로 정한 발행연도의 기준을 1910년이 아니라 최소한 1945년으로 확대해야 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표 1〉 1911년 이후 발행된 고문헌의 발행시기별 서지 건수(2021년 8월 기준)

연도	국내	국외	합계	비율(%)
1911~1920	16,655	254	16,909	14.86
1921~1930	17,127	358	17,485	15.37
1931~1940	17,472	309	17,781	15.63
1941~1945	2,395	24	2,419	2.12
1946~1950	2,013	28	2,041	1.79
1951~1960	7,117	61	7,178	6.31
1961~1999	49,877	55	49,932	43.89
합계	112,656	1,089	113,745	99.97

나. 판본 및 인쇄방식

판본은 발행시기 다음으로 우선 고려해야 할 항목이다. 19세기 말 개항 이후 신문물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석인본 또는 신연활자본의 간행이 이어졌고 일제강점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신연활자본은 20세기 중반 이후까지도 그 판본이 남아 있고, 장정이 선장(線裝)인 경우도 있지만 서양식 장정으로 전통 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많다. 서양식 장정의 신연활자본에 대해서는 이른바 ‘근대고문헌(가칭)’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2〉 1911년 이후 발행된 고문헌의 판종별 서지 건수(2021년 8월 기준)

번호	판종	서지 건수	비율(%)
1	목활자본	7,921	6.96
2	목판본	8,237	7.24
3	필사본	4,977	4.37
4	신연활자본	15,883	13.96
5	석인본	20,622	18.13
6	영인본	16,858	14.82
7	미상	17	0.01
8	기타	118	0.10
9	적용하지 않음 ³	39,112	34.38
총건수		113,745	99.97

3 소장처에서 판종을 입력하지 않아 정확한 판종을 알 수 없는 서지 데이터로 모두 39,112건이다.

1911년 이후 발행된 고문헌의 판종별 서지 건수(113,745건)를 분석(〈표 2〉 참조)해보면, 신연활자본과 석인본이 전체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에도 족보와 문집을 출판하기 위해 전통적인 인쇄방식인 목판본과 목활자본의 비중이 14%나 된다는 것이다. 판본을 표기하지 않아 적용하지 않은 약 39,112건을 제외하면 약 21.6%가 되며, 영인본과 기타, 미상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약 28%나 된다. 신식 인쇄기술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에 전통 방식의 인쇄 또한 상당 부분 유지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1911년 이후로도 전통 방식의 목활자인쇄가 증가하고 그 양상이 1940년대까지 이어지는 사실은 고문헌 발행연도의 기준을 최소한 1945년으로 확대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다. 전통 한지의 사용 여부와 장정의 방식

신식(근대활판) 인쇄용지가 널리 쓰였음에도 목활자본 족보 및 문집 출판이나 석인본에는 여전히 전통 한지를 사용하였다. 전통 방식의 서적 발행 경향은 193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으며, 193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전통의 목활자 또는 목판 인쇄방식이 신식인쇄술의 경제성, 편이성 등과 같은 이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점점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다. 1940년대를 즈음해서 이러한 방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오랫동안 전통 방식으로 발행한 족보나 문집에 새로운 목활자를 제작하기보다는 이미 많이 보급된 신식 인쇄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1930년대 후반에 점차 줄어드는 목활자본의 발행 종수와 그 반대로 최고 발행 종수를 보이는 신연활자본과 석인본⁴의 발행 종수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인쇄방식이 신연활자본으로 변화되면서 장정의 변화와 함께 전통 한지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고문헌의 기준으로 전통 한지 사용 여부를 적용하되, 그 하한 시기를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1945년으로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 ‘근대고문헌(가칭)’의 구분 관리 필요성

장정과 판본에서 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은 신연활자본이면서 서양식 장정으로 1945년 이전에 발행된 문헌이다. 이른바 딱지본 소설류나 교과서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 이른바 ‘근대고문헌(가칭)’으로 이름 지을 수 있는 문헌으로 대부분 서양식 종이를 써서 발행한 책들이다. 이들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연구 추세에 힘입어 많은 주목을 받는 문헌으로, 서양식 인쇄용지를 사용하고

4 석인본의 경우 신식 인쇄방식이지만 전통 한지를 사용한 인쇄물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하지만 그러한 석인의 방식도 1940년대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고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극히 일부 전통 방식 인쇄가 있지만 대부분 신식 인쇄방식으로 발행한 책이다. 그 범주에는 전통 방식 인쇄로 서양식 종이를 쓴 경우나 판본은 석인본인데 종이가 서양식인 경우도 포함된다.

고문헌 발행시기의 기준을 1945년 이전 문헌으로 우선 적용하여 정할 경우 판본, 종이, 장정 등 다른 3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판본과 종이 상태, 장정 형태가 전통 고문헌과 전혀 다른 것을 함께 보관하는 것은 보존관리, 열람, 정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종이 재질이 상이하여 일반 고서와 보존관리 방식이 달라야 한다. 즉 서양식으로 장정한 신식인쇄본은 비록 고문헌 범주에 속하더라도 구별해서 별도 공간과 운영체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책의 발행시기는 고문헌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장정은 동양식 선장(線裝)이 아닌 서양식 장정에 종이는 대부분 전통 한지가 아니며, 판본은 개항 이후 유입된 신연활자본, 석인본, 등사본 등이 대상이 된다. 현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 포함된 상당수 일제강점기 발행 문헌과 대한제국기 신식 인쇄문헌이 ‘근대고문헌(가칭)’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의 시기적 추이와 범주

1.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장서의 관리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은 1945년 개관 이후 1947년 1월 1일자 조직도에 사서부(司書部)의 ‘고전과(古典課)’로 별도 조직이 마련되었고 이후 1949년 5월 6일자 조직도에도 존속하나 1957년 5월 31일자 조직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어 1970년 조직도에는 사서과(司書課)의 고서계(古書系)의 명칭이 보인다.⁵ 1992년에는 고문헌의 수집과 열람 관리를 일원화하려는 목적으로 열람관리부장 직속으로 고전운영실(古典運營室)이 신설되었는데 1947년 ‘고전과’와 같이 ‘고전(古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1994년 열람관리부장 직속에서 자료조직과 소속으로 이관되었고 직제개편에 따라 2004년에는 자료기획과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2007년에는 도서관연구소 소속으로 이관되지만 부서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 2016년에는 자료관리부 산하의 과 단위 조직인 ‘고문헌과(古文獻課)’로 확대되었다.⁶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등록은 동양서, 서양서, 고서, 아동도서, 비도서자료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⁵ 국립중앙도서관 (1973). 국립중앙도서관사. 265-269.

⁶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136)

동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한자문화권의 문자로 쓰인 자료를 말하며, 고서의 경우 ‘1910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동장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간행 필사된 동장본은 평가를 통해 고서로 한다’⁷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헌을 수집하기 위한 연대별 하한선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말기인 1910년 이전, 중국은 청말(清末)인 1911년 이전, 일본은 메이지(明治) 이전인 1867년으로 정했는데 고문헌 외에 다른 자료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2.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장서의 시기적 추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문헌 전체 장서의 발행시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협조로 고문헌 전체 목록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2021년 4월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문헌으로 등록된 자료의 서지 레코드 수는 모두 83,439종이며 이 중 고서는 62,191종, 고문서는 21,248종이었다. 시기적 추이는 고서를 대상으로 목록 정보에서 발행년을 추출하였고 발행사항이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는 고서의 특성상 ‘[發行年不明]’(발행년불명), ‘[刊寫年未詳]’(간사년미상) 등으로 발행사항이 입력된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발행년에 대한 필드값이 없는 경우, 간기가 고갑자(古甲子)로만 되어 있거나 ‘朝鮮中期’(조선 중기)나 ‘後印’(후인), ‘後刷’(후쇄) 등 명확한 시기 추정이 어려운 경우도 전처리 작업으로 제외하였다.

조사 결과(〈표 3〉 참조)를 분석해보면 1911~1945년에 발행된 자료는 전체의 24.20%이며 1946~2021년 발행자료는 모두 10,811종으로 17.39%였다. 1990년대 이후 발행된 자료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 제작한 복제본과 도서관의 등록기준에 따른 동장본 형식의 자료들이 있기는 하나 고문헌의 기준이 되는 1910년 이후 자료들도 상당수 고문헌의 범주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의 발행년 분포

발행년	종수	비율(%)
1499년 이전	256	0.41
1500~1599	409	0.66
1600~1699	1,707	2.74
1700~1799	3,561	5.73
1800~1899	10,501	16.89

7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581호. [인용일: 2021. 7. 26.].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9783>

발행년	종수	비율(%)
1900~1910	2,410	3.88
1911~1945	15,051	24.20
1946~1950	459	0.74
1951~1960	1,605	2.58
1961~1970	2,265	3.64
1971~1980	1,789	2.88
1981~1990	2,463	3.96
1991~2021	2,230	3.59
[發行年不明]	17,153	27.58
필드값 없음	59	0.09
기타*	273	0.44
합계	62,191	100

*고갑자, 조선 중기, 후인, 후쇄 표기 등의 자료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11~1945년에 발행된 자료로서 고서로 관리되는 장서의 주제 중 100종 이상의 분포를 보이는 주제를 조사한 결과 국립중앙도서관 시기에 수집되어 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편(KDCP)으로 정리된 자료는 문집, 전기, 족보 등의 주제가 중심이 되었으며 조선총독부도서관 시기에 수집된 자료도 그 순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족보⁸가 다수를 차지했고 문집, 전기, 지지류 등의 주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1911~1945년에 간행된 자료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서로 수집, 정리되어 관리하는 자료의 수집 주제나 수집 시기에 따른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 주제에서도 유사한 범위 내에 있었다.

IV. 시대 변화에 따른 근대문헌 범주의 재설정 문제와 방안

1. 근대문헌의 관리 실태

가. 주요 기관의 상황

지금까지 파악된 고문헌 소장 174개 기관의 경우⁹ 해당 기관에는 고문헌만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⁸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족보 수집에 대해서는 '정진석 (2012). 일제강점기의 출판환경과 법적 규제. 근대서지, 6, 23-53' 참조.

⁹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25).

‘근대계몽기부터 해방기까지, 또는 일본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근대문헌이나 근대문헌과 관련 자료들도 소장하고 있다. 이로써 일부 기관에서는 고문헌 범주 내에서 근대문헌을 관리하는 별도 기관을 두거나 관련 내규를 정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기관별 ‘고문헌 관련 내규와 근대문헌 관리’ 현황

번호	구분	기관명	고문헌 관련 내규 및 근대문헌 관리 현황
1	국립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에 대한 별도 공시 규정 없음. 그러나 ‘지식정보관리부’ 아래 고문헌과 설치 및 운영하며, 근대문헌은 고문헌과에서 관리(‘21. 9. 24. 직제개편 이후)되고 있음. 아울러 홈페이지에서 ‘근대문학종합목록’을 제공하며,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 제공(상세 검색에서 제목, 저자, 발행처, 기관별, 장르별, 발행연도별로 조회할 수 있는 검색 기능 제공)
2	국공립대학 도서관 및 주요 기관	경상대 중앙도서관	근대문헌에 대한 별도 공시 규정 없음. 그러나 자체 고문헌 관리 규정 내에서 근대문헌을 ‘근현대 귀중 및 희귀자료’로 언급하고 관리함
3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근대문헌에 대한 별도 공시 규정 없음. 그러나 일반 고도서 항목을 설정함. 예를 들어, 1945년 이전 수집, 1945년 이후 수집 등으로 근대문헌을 구분. 아울러 이를 ‘한국학 자료’로도 명명함
4		한국학 중앙연구원	근대문헌에 대한 별도 공시 규정 없음. 그러나 장서각과 한국학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하며 근대문헌은 한국학도서관에서 관리함. 아울러 한국학도서관 사이트에 근대자료 산책이라는 코너를 운영함
5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근대문헌에 대한 별도 공시 규정 없음. 그러나 고문헌 소장 자료 중에서, 한국근대지리지, 한국근대지도, 고신문, 구일서 등으로 따로 구분하여 관리함
6	사립대학 도서관 및 관련 기관	고려대 도서관	근대문헌에 대한 별도 공시 규정 없음. 그러나 근현대 자료를 별도로 선정하고 근대자료 중 귀중본, 신문과 잡지 등을 디지털화(digitizing)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함
7		단국대 퇴계기념 중앙도서관	근대문헌에 대한 공시 규정이 있음. 고문헌에 대한 규정 내에, 근현대 자료를 준고서(準古書)로 규정함. 준고서는 “1910년 이후부터 1959년 이전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유일본(唯一本) 또는 희귀본(稀貴本) 도서. 1910년 이후 출판된 동장본 형태의 간본 및 사본. 소장 중인 고서, 귀중본, 고문서 등의 복제자료(형태 불문). 기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도서 등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헌 일체를 말함”이라고 정의 내림
8		연세대 학술정보원	근대문헌에 대한 공시 규정이 있음. 고문헌에 대한 규정 내에, 고문헌을 ‘고서 및 신서 귀중본’으로 구분함. 근대문헌의 경우에는, 신서 귀중본이라 명명하고 이를 “개화기 이후부터 한국전쟁기 이전에 국내에서 간행된 자료”, “한국전쟁기 이전에 국외에서 간행된 한국 관련 자료”로 구분해놓음
9		이화여대 도서관	근대문헌에 대한 공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고문헌에 대한 규정 내에 고서, 준고서, 귀중본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10		송파책박물관	근대문헌에 대한 공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운영부에서 근대문헌, 근대서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해당 자료를 구매함
11		한국근대문학관	근대문학의 범주를 설정. 그 기간을 근대계몽기에서 해방기까지로 설정하여 문학 자료만 집중적으로 보존, 관리 및 구매함
12		아단문고	근대문학 자료의 대표적인 수집, 연구기관. 근대서지학자 백순재(白淳在)가 수집했던 개화기부터 1960년대까지 간행된 희귀 단행본과 신문, 잡지, 신문 스크랩, 주요 문인들의 육필 원고 등을 기반으로 함

즉 국립중앙도서관, 경상대 중앙도서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송파책박물관, 한국근대문학관, 아단문고 등이 대표적인 기관으로, 이곳에서는 현재

고문헌의 규정 내에서 “근대계몽기부터 해방기까지, 또는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근대문헌이나 관련 자료”를 별도로 ‘준고서(準古書)’로 분류하거나 ‘근대문헌’으로 규정하여 수집·보관·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오래된 기관, 관리 주체가 국가이면서 일제강점기 이전의 자료를 넘겨받은 곳으로 “근대계몽기부터 해방기까지, 또는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근대문헌이나 관련 자료”를 상당수 소장하고 있는 기관, 특별히 근대문헌만 수집·보관·관리하려고 설립된 기관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기관들은 현재 고문헌 규정과는 별도로 선제적인 관점에서 “근대계몽기부터 해방기까지, 또는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근대문헌이나 관련 자료”를 ‘고문헌’과 같이 보존·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단국대는 근대문헌을 ‘준고서’로, 연세대는 ‘신서(新書) 귀중본’으로 규정하여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과 차이가 있지만 한국근대문학관, 아단문고처럼 근대문헌에서 ‘근대문학 분야’만 따로 항목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근대문헌이나 관련 자료를 구입·보존·관리하는 곳도 있다.

나. 온라인 전자통합시스템의 상황

현재 국내에서 고문헌을 관리하는 온라인 전자통합관리시스템의 대표적 사례로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있다. 두 시스템을 보면 현재 고문헌 규정 내에서 융통성 있게 ‘근대문헌’을 고문헌에 포함시켜 관리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재 고문헌 분류 체계 내에서 고문헌 및 관련 자료를 위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헌의 세부 항목에 따라서는 “근대계몽기부터 해방기까지 또는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근대문헌이나 관련 자료”를 고문헌 항목에 포함시켜 필요한 자료를 DB로 구축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는 “도서나 연속간행물 항목”에서 “근대계몽기에서 해방기까지”의 주요 근대문헌만 선별하여 해당 자료의 서지 정보, 목차, 주요 내용 등을 일반인들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 기타 기관과 학회의 상황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중인 ‘근대문학종합목록’ 사이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조사한 근대문학자료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제강점기부터 관리하고 있던 “근대계몽기에서 해방기까지 수집하고 있던 근대문헌”과 관련된 각종 DB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근대문헌의 저자,

발행처, 기관별 소장 현황, 갈래별 특징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¹⁰

또한 근대문헌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특화된 수집 및 운영을 보여주는 곳은 한국근대문학관이다. 한국근대문학관의 설립과 운영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근대문헌의 정의, 시기, 범주를 근대계몽기(1894년)부터 해방기(1948년)까지 출판된 것, 필사된 자료, 기타 유관 자료로 규정한 것이다.¹¹

학회 차원에서 근대문헌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곳은 근대서지학회이다. 이 학회에서는 학회지 『근대서지(近代書誌)』에서 근대문헌의 분야를 “문원(文苑), 인쇄·출판서지, 문학서지, 예술문화서지, 역사문화서지, 아동문학서지, 비공개 자료 및 희귀본의 영인, 희귀본 잡지의 목록” 등으로 구분하여 근대문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근대서지학회에서 학회 설립부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근대계몽기에서부터 해방기까지 출판된 단행본 및 희귀본 잡지”의 정확한 서지사항과 서적의 내용·목차를 제공하는 일이다.¹²

2. 근대문헌의 관리 방안: 규정과 범주 마련 중심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근대문헌의 보존과 관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화재청 주관으로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문화재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고, 근대문헌 중에서도 희귀본 ‘신문과 잡지’에 한하여 진행되어 근대문헌의 개념과 범주를 확정 짓지 못하였다.

근대문헌을 규정하고 범주를 마련하려면 먼저 ‘근대’의 기점을 언제로 보고 ‘근대’의 하한 시기를 언제로 할지 정해야 한다. ‘근대’라는 개념과 시기 설정은 학계마다 이견이 많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근대의 기점을 임진왜란 이후로 보는 견해, 실학이 등장했던 17세기 말·18세기 초로 보는 견해,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보는 견해, 한일강제병합 이후로 보는 견해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근대의 하한 시기 또한 8·15해방 이전으로 보는 견해, 8·15해방 이후로 보는 견해, 한국전쟁 시기로 보는 견해,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수립 직전 시기로 보는 견해 등으로 매우 유동적이다.¹³ 그뿐만이 아니라 국문학 분야에서도 근대를 언제로 볼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고 여전히 논쟁 중이다.¹⁴

10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종합목록 <https://www.nl.go.kr/NL/contents/N50205020000.do> [인용일 2021. 7. 30.]

11 한국근대문학관 <http://lit.ifac.or.kr> [인용일 2021. 7. 30.]

12 근대서지학회의 여러 중요한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을 발행한 일이다. (오영식 (2009).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 서울: 소명출판.)

13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7-29.

14 김영민 (2012). 문학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 근대문학 1890~1945: 제도, 언어, 양식의 지형도 연구. 서울: 소명출판.

근대문헌의 보존과 관리가 시급한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근 제정된 「문학진흥법」과 문화재분과에서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등록문화재’ 제도에서 확정한 ‘근대’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문학진흥법」은 2016년에 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대’의 개념, 범주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를 거친 결과 “언어, 제도, 사상 세 가지 측면”, “근대적 인쇄출판과 근대문학의 뚜렷한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지점”을 ‘근대’의 기점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 출발점을 1894년 게일(James Scarth Gale)의 『천로역정(天路歷程, Pilgrim Progress)』 번역, 1895년 유길준(兪吉濬)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의 출간으로 잡았고, 그 하한선은 1945년 해방기까지로 하였다. 근대문학의 범주는 ‘근대문학자료유산 가이드’라 명명하고 그 범위를 정해놓았다.¹⁵ 근대문헌의 범주에서 도서만이 아니라 비도서(문인유품)까지도 보존·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기존의 분류와 가장 큰 차이점이며, 무엇보다 완성된 서적(문학)만이 아니라 결과물로 산출되기 위한 여러 요소를 ‘근대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행된 ‘국가등록문화재’에서는 근대의 개념, 근대문화재의 정의를 “개화기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건축물, 기념물, 구조물 등 우리 삶과 함께했던 근현대 시기의 문화적 소산 전체”,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이자 한국사의 연속적 전개 과정으로 보고 외래 문물의 수용, 경제구조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건설 또는 제작된 지 50년 이상 경과된 것”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¹⁶ 이런 규정에 따라 근대문헌 중에서 최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과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에서 만든 『말모이』와 『조선말 큰사전 원고』이다.

지금까지 유관기관에서 규정한 근대문헌의 개념, 범주와 결과물을 참조한다면 근대, 근대문헌의 시기는 “근대개몽기에서부터 해방기까지”로 잡고, 해당 분야를 “단행본, 신문, 잡지, 관련 기록물” 등으로 폭넓게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1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국내 근대문학 자료 소장 실태 조사. 국립중앙도서관.

1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근대 동산문화재 보존 방안 연구. 문화재청;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근대문화유산 분류 방안 연구. 문화재청.

V. 맺음말

국립중앙도서관 등 고서 약 230만 책을 소장한 여러 기관(민간 소장처 제외)에서는 국내 고문헌의 시기 기준을 1910년 이전에 발행된 문헌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 수록된 서지데이터(약 47만 5천여 건)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서(62,191종)를 분석한 결과 1911년 이후 자료를 고문헌으로 관리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고문헌의 기준연도를 기존 1910년에서 1945년으로 확대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고문헌 범주 내에서 판본, 종이, 장정 등의 설정 기준을 적용한 근대문헌의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대문헌은 우리 역사 근대시기의 사회상을 현재에 전달하고 전통과 현대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록문화유산이다. 특히 근대문헌은 서양식 장정 방식인 신식인쇄본으로 제작되어 비록 고문헌 범주에 속하더라도 종이의 재질이 상이하여 일반 고서와 보존·관리 방식이 달라야 한다.

* 각주로 참고문헌 같음